

천13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성별 구성비는 1965년에는 남자 교원이 83.9%였으나 1995년부터 여자 교원이 남자 교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전체 중학교 교원 가운데 여성이 69.2%를 차지했다.

1965년 60.7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8.0명, 2002년 36.7명, 2004년 35.1명, 2008년 34.7명, 2011년 33.0명, 2012년 32.4명, 2013년 31.7명, 2014년 30.5명, 2015년 28.9명, 2016년 27.4명, 2017년 26.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39.4명에서 1980년 45.1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2000년 20.1명, 2001년 19.6명, 2008년 18.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7명, 2013년 16명, 2014년 15.2명, 2015년 14.3명, 2016년 12.9명, 2017년 12.4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1965년 389개교에서 계속 증가해 1990년 1천 개를 넘어선 뒤, 2010년 1천561개교를 기록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1965년 312개교에서 2010년 692개교로 늘었다.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 구분이 다양해졌다. 2017년 기준으로 일반고 1천556개, 특수목적고 155개, 특성화고 491개, 자율고 158개교가 있다.

학생 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1965년 25만4천95명에서 1990년 147만3천155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했다. 전문계고는 1965년 17만2천436명에서 2010년 46만6천129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학생 수는 일반고 119만3천562명, 특목고 6만7천960명, 특성화고 27만4천281명, 자율고 13만3천896명이다.

일반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7천894명에서 2010년 9만 735명으로 늘었고 전문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6천214명에서 2010년 3만5천688명으로 늘었다. 2017년 현재 교원 수는 일반고 9만1천64명, 특목고 7천674명, 특성화고 2만5천853명, 자율고 1만163명이 있다.

고등교육

■ 전문대학

전문대학 수는 1965년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교로 증가했다. 이후 199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99년에 161개까지 늘었다. 이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138개교로 1990년 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수는 1965년 2만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 16만5천51명, 2003년 92만5천963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4년제 대학 진학 선호 등의 이유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67만7천721명으로 떨어졌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57.5%였다가 1970년 72.6%로 높아졌다.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엔 감소 추세를 보이며 50~60%를 기록했다. 1990년부터 다시 상승해 2009년 86.5%까지 높아졌다가 2016년에는 70.6% 수준으로 떨어졌다.

■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80년 100개교로 늘었으며,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현재 189개교가 됐다. 국공립 대학교가 1965년 14개교에서 2017년 35개교로 늘었고, 사립대학교는 1965년 56개교에서 2017년 154개교로 증가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학생 수는 1965년 10만5천64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1990년 104만166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206만5천451명, 2012년 210만3천958명, 2013년 212만296명, 2014년 213만46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 211만3천293명, 2016년 208만4천 807명, 2017년 205만61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05년 65%, 2006년 67.3%, 2008년 68.9% 등으로 높아지다가 2009년 68.2%로 주춤했다. 2013년 55.6%, 2014년 54.8%로 떨어지다가 2015년에는 64.4%로 다시 올랐고 2016년에는 64.3%로 약간 떨어졌다.

교육계 동향

■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은폐·축소 의혹

6월 서울 송의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생 4명이 4월 학교 수련회에서 같은 반 학생 한 명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과 특별감사를 벌여 7월 학교폭력 사건 은폐·축소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 부장,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의 해임·정직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이 문제가 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장·교감이나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관련 교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 등을 유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가해자와 목격자 진술서 6장을 분실한 것도 법률위반이라고 보고 학폭위 회의록 유출과 진술서 분실에 관련된 교원 전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의초등학교는 교육청 감사결과와 교원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청구했다. 교육청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송의초는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이 학교 학폭위 결론에 대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에서는 폭력에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회장 손자인 학생을 뺀 나머지 가해자 3명만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2018년 2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송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폭위 회의록을 학부형에게 제공한 혐의(학교

폭력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추진·철회

9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제고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월 기준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9월 18일과 추석 연휴 직전인 26~29일 집단휴업을 추진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총 4천200여 곳으로 약 90%가 집단휴업을 추진한 한유총 소속으로 추산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을 불모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도 강경 대응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휴업 강행 시 원아 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해 임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유총은 1차 집단휴업일 직전인 9월 15일 집단휴업 철회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인상에 노력하고,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사립유치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유총 내 강경파인 '한유총 투쟁위원회'가 7시간 만에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했다. 투쟁위는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애초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휴업 강행 시 폐원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여론도 극히 나쁜 상황에서 대부분 시·도 지회가 집단휴업 불참을 선언하자 한유총 지도부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 전국서 청소년 폭력...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 추진

9월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을 꿇려 사진까지 찍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이 선배에게 보낸 사진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강릉에서도 7월 여고생 등 10대들이 또래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10대들이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폭행했고 천안에서도 10대들이 또래 여중생을 마구 때린 일이 발생했다.

청소년 폭력사건이 계속되자 정부는 9월 1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2월 22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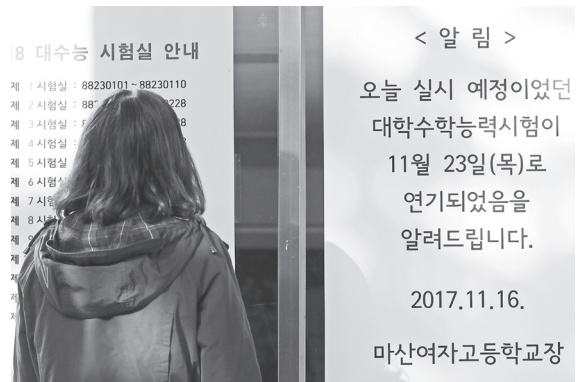
우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 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5개 더 만들고 '의료소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하되 오펜·축소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 지진에 사상 첫 수능 연기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튿날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수능이 연기되면서 이어지는 대학입시 일정도 차례로 밀렸다.



▲ 11월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23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이 연기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군 당국은 수능을 보기 위해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로 변경해 연기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당수 여행사, 항공사, 호텔은 수능 연기로 여행을 취소한 수험생에게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 없이 일정을 조정해 줬다.

수능이 미뤄지면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이들을 지원한 지원 인력 등도 추가 감공생활을 해야 했다. 출제위원들은 역대 최장인 41일간 감공됐다.

수능 연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원래 수능일인 16일 포항에서는 규모 3.0 이상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계속됐다.

지진같이 예상치 못한 일로 수능이 미뤄진 것은 1993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었다. 2005년과 2010년 각각 아시아 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문에 수능이 미뤄진 적이 있으나 이는 연초에 결정된 것이어서 혼란은 없었다.

여진으로 시험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은 큰 탈 없이 끝났다. 포항시 북구 시험장 4곳은 남구 대체시험장으로 옮겨졌다. 영천과 경산 등 포항 인근 지역에 예비시험장 12곳이 마련됐으나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2018학년도 수능에는 53만1천327명이 응시해 2017학년도(55만2천297명)보다 응시생이 3.7% 줄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후 총 2만715건의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수능이 미뤄져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경우는 60건이었다.

■ 잇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재탕 정부대책

11월 20일 제주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A군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숨졌다. 이처럼 학생이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는 거의 매년 발생했다.

A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고 학생의 현장실습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각 시·도 교육청에 모든 현장실습 기업의 학생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12월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취업준비 과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만 최대 3개월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현장실습 관련 정부 대책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8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다. 2017년 8월에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현장실습을 취업중심이 아닌 학습 위주로 바꾸겠다고 실습 기간을 줄이고 실습생 신분도 '학생이자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2017년 12월 정부 대책이 재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 취업형 현장실습이 갑자기 폐지되면 직업계고교생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22일 후속대책 격인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내놴다. 안전한 실습 여건을 갖춘 기업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도 교육청은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취업연계를 위해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이후 입사(재용)를 허용하고, 선도기업이 아닌 곳에서 실습하면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후 채용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 특성화고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전체 70개교 가운데 62.8%인 44개교에서 지원자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은 33개교 중 14개교, 인천은 26개교 중 12개교가 선발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점과 함께 공고와 상고에 대한 선호 감소, 현장실습 사고 반복 등을 직업계고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 서울 은혜초,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으로 폐교

서울 은평구 소재 사립초인 은혜초등학교가 12월 28일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폐교인가를 신청했다.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폐교를 신청해 학부모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서울 초등학교가 학생 감소를 이유로 폐교 신청을 한 건 처음이었다. 2015년 은평구 알로이시오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이 학교는 고아들을 돌보던 학교로 고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학교를 더 운영할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은혜초 폐교 신청은 학령인구 감소가 대도시 도심에 자리한 학교를 문 닫게 할 정도로 현실적 문제가 됐다. 점에서 충격을 줬다. 1997년 75만6천542명이던 서울 초등학교생은 2017년 42만8천333명으로 43.4%(32만8천209명) 줄었다.

전국의 경우 1965년 449만1천여 명이던 초등학교생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에 입학한 197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1985년 485만6천여 명, 1995년 390만5천여 명, 2005년 402만2천여 명, 2015년 27만4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2017년에는 267만4천여 명까지 떨어졌다.

은혜초 폐교 신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분산 계획과 폐교 후 교직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즉각 반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감소에 따른 운영 위기가 은혜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체 사립초 재정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특화된 영어수업을 장점으로 내세우던 사립초들이 학생 감소의 영향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는 2018년 1월 23일 교육청이 은혜학원의 수익용 재산을 활용된 적자보전 허가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폐교추진 중단 및 학교 정상화를 합의했다. 이후 수업료와 잔류 교사 선정문제 등으로 은혜초 측과 학부모 간 갈등이 계속되다 3월 6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전부 전학시키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교됐다.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개선 방안

2018~2019년 단계적 확대, 2020년부터 전면 시행

	현행 근로중심 현장실습	개선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자율(근로중심)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신분	학생 및 근로자 혼용	학생
현장실습 운영기간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수업일수 1/3범위 이내)까지 가능
운영형태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운영 프로세스	취업처 발굴 → 현장실습(조기 취업) → 졸업 후 정식 취업	실습업체 발굴 등 사전준비 → 현장실습(취업 준비) → 동계방학 시작 후 취업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권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보장	기업(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료/ 사회관계장관 회의,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